

| 노사정이 바라본 합의의 의미 |

4.23. 노사정대표자 합의의 의미와 노사정의 과제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 전 고용노동부 강원지방노동위원장
- 전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장
- 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장
- 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기획총괄과장
- 전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팀장



대통령께서는 지난 5.1.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사회적 대화만이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유럽 주요 선진국의 위기극복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만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수 있고, 새 정부 핵심 국정기조인 노동존중사회 실현도 가능할 것이다.

오랜 공백 끝에 지난 1.31.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제1차 노사정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다. 정부 출범 후 사회적 대화의 첫 발을 내딛는 데까지 8개월이 걸렸다.

처음에는 노사의 입장이 좁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3개월 동안 열여섯 차례 운영위원회와 실무협의 등 논의를 거듭하며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고 양보하였다. 그 결과 4.23. 제3차 대표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기구 개편방안과 논의의제에 의견을 모았다.

4.23. 노사정 합의는, 그간의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 틀을 벗어나 노사(勞使)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낸 사회적 합의라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바꾸면서 기존 노사단체뿐만 아니라,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중견기업·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이해 대변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이다.

이와 함께, 경제의 디지털 전환과 노동의 미래,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 사회안전망 개선,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법·제도·관행 개선 등 4개 의제별위원회 운영에도 합의하면서, 산적한 노동현안에 대한 장기비전을 논의할 수 있는 장(場)이 마련되었다.

지난 5.28,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지 18일 만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환경노동위원회 숲 위원이 발의에 참여한 것은 4.23. 노사정 합의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는 정부를 비롯한 노사정의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국가 미래와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성과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할 때이다. 새로이 확대되는 참여 주체 선정과 의제별 위원회 논의 틀거리 마련 등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출범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사회양극화, 청년일자리,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 등 우리 앞에 놓인 산적한 노동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에는 노사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오랜 공백 끝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끈이 어렵게 연결된 만큼, 개별 현안과는 별개로 우리 사회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변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란다.